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15.6.29.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2015년 업무계획 및 규제 기요틴 과제, 주요 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와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오염물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공장입지를 허용하게 된다.

둘째,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의 용적률을 별도의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의 건폐율을 조례로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자기거주주택 용지 3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용지 4년이었던 사용 의무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건축선 등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일괄 변경신고 처리 대상****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도록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나,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을 경우(5년 이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의 평가와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와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가 건축주·토지소유자·사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 촉진과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옛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에 한정한다.

***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한다. 하지만 경미한 변경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동수나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m² 이하인 경우, 층수 변경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 높이 1m 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모집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해외건설지원과
2015.6.30.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2015.7.10.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모집하였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51개사 44건 22억 원의 지원사업을 1차 선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유가 하락, 중동 지역 정정 불안, 세계 건설업계 경쟁 심화 등 때문에 상반기 수주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중견·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주수금액은 건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진출시장의 다변화에 기여하고자 올 하반기에도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진출국가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당 2억 원 이내이며(타당성조사 3억 원 이내),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 신(新)시장 기준에 대기업의 실적이 포함되어 대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모집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실적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가에서 활동을 지원해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한층 완화하였다.

* 중견기업은 2014년 1억 9,000만 달러에서 2015년 4억 4,000만 달러, 중소기업(하도급 포함)은 2014년 14억 달러에서 2015년 14억 9,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진출 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한 국가 한옥정책 관련 업무 본격 수행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5.6.3.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5.7.28.

지난 6월 4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 등 건축자산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 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 ▲한옥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한옥 전문 인력 양성 및 한옥 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지원·육성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서는 국가 한옥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하여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다.

국가한옥센터는 앞으로 한옥 관련 보전·진흥정책 연구·조사, 전문산업 육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국가한옥정책의 연구집단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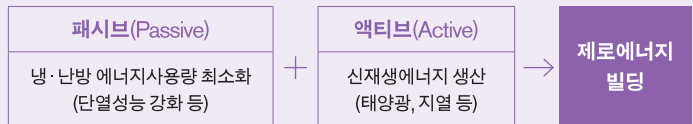
한옥 등 건축자산법의 시행은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 조성을 통해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한옥센터의 맞춤형 정책 발굴·운영으로 고유 건축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제도 운영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5.6.23.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2015.7.28.

국토교통부는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단지로 '송도 6·8공구 A11블록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였다. 2014년 저층형(8층 미만, 5개소)부터 추진되어 올해에는 고층형(8층 이상, 2개소) 건물 및 대규모 단지에 고단열·고기밀 건물 외피 적용, 단지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구축,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도입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단지에는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BEMS 설치비용 30~50% 보조), 건축기준 완화(용적률·높이 기준 15% 이내 완화), 세제 감면(취득세 15%, 5년간 재산세 15% 감면), 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를 통한 기술 지원 등이 이뤄진다. 입주자는 최대 77%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고, 인천시 평균 대비 전기비용 50% 이상, 난방 비용 40% 이상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7월 3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 변경을 고시하고, 9월 1일부터 대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계획단계부터 줄여 나가고자 한다.

서울 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 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되면 전력·가스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월별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관리하게 되므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관련 규정이 없었던 벽면율에 대해서는 50% 이상 벽면율을 확보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신축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확보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조명 등 사용량 의무 기준은 에너지 생산시설(미니 태양광, 집단에너지 시설) 다변화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의 조명은 조명 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강화된다.

이밖에도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의 입법취지에 맞춰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과 초미세먼지 관리 대책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건축물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확대 시행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2015.5.27.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2015.7.21.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건축과
2015.6.23.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해부터 기초 법질서 준수 및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6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셉테드 전략의 범죄예방 효과성과 한국형 셉테드 구현 필요성’을 주제로 ▲법무부의 법질서 실천운동, 그 평가와 전망 ▲셉테드의 사회적 공간성과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 ▲한국형 셉테드 구현 필요성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민선 6기 도정 방향인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난해 도비 4억 원을 들여 고양시와 안양시에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지역 중에서 경기도의 수원·안산·부천·평택·파주·양주 6개 시가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된다.

그중 평택시는 여성 거주 원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시 지동에서는 지난 6월부터 경기경찰청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 취약지역에 셉테드를 적용하는 사업인 ‘안전 시범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수원시 매교동은 CCTV 확충, 밝은 골목길 조성, 공가 및 폐가 등 범죄 유발 장소 차단, 훼손된 골목길 포장, 벽화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도 올해 창원시와 밀양시에 각각 1억 원을 투입하여 셉테드를 적용,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경남지방경찰청이 범죄 발생 취약지역(Hot Spot) 5곳을 지정하면 사업에 들어가 연내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밀양시 역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밀양여고 주변 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밀양시, 밀양 경찰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설명회도 끝마친 상태이다.

도는 셉테드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행하며, 건축심의·허가 시 셉테드를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실행할 방침이다.

패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2015.7.31.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
2015.8.7.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2015.7.14.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2015.7.2.

서울시는 '2015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을 열고 58점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은 2007년부터 매년 다른 주제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을 패적하고 활기차게 만들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서울 도심 속 함께하는 휴식공간'을 주제로 서울역 고가, 세운상가, 고척돔 구장 등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간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벤치·의자, 그늘막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받았다.

수상작은 실물로 제작되어 서울시청 광장에 전시되며, 활용도가 높은 작품은 이후 다른 공공장소에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에 대한 작품집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산하 사업소에 널리 배포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서울시의 디자인정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시 표준디자인 3차 개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시 상징 아이콘과 보도패턴,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와 시민 게시대, 공공안내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시민공모를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표준디자인 개발과 적용이 가로에 만연한 시각공해를 줄이고 패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2010년부터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사설안내표지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현재 설치된 사설안내표지의 60%에 표준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표준디자인 정착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표준디자인 오류를 계도·개선하여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라북도는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총 56억 원의 예산으로 20개 지구에서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익산 KTX 역사 주변 지역을 포함한 5개 지구를 선정하여 노후한 간판과 건물벽면을 정비한다. 특히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전문가(자문위원) 및 지역 상가민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특색에 어울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간판 시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